

다산포럼

남영신



새해가 되자마자 노무현 대통령은 고위 공무원들 앞에서 일부 언론을 불랑상품으로 규정하는 직설법을 사용하였다. 언론이 대통령을 조롱하는 논조를 지속해 온 데 대한 대통령의 반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요즘은 대통령을 '찔지' 않으면 축에 못 낀다는 뜻이 신문에서부터 거리와 사무실과 계도임과 술집에서까지 대통령을 조롱하는 장면을 흔히 볼 수 있고, 이렇게 대통령을 조롱할 수 있게 된 것이 민주주의가 완성된 증거라고 주장하는 의원이 있을 정도다. 그러나 대통령을 조롱했다 기보다는 어쩌면 우리 자신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민주주의를 조롱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다.

말로 먹고 산다고 하는 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출현하자 모든 사람들은 그의 현란한 말솜씨를 듣고 싶어했는지 모른다. 그런데 그의 말은 언제나 직설적이고 때로는 무모하게 들리기까지 했다. 그의 막말에 언론이 들고일어났고 국민이 이에 화답함으로써 결국 대통령의 말은 국민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나는 언어를 이미지로 파악하는 언어적 왜곡

의 역기능이 언론을 통해서 증폭되고 이를 다시 국민이 체화하고 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언어적 왜곡이란 언어가 주는 이미지에 사로잡혀 언어의 개념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이나 목적에 맞추

어 언어를 사용함을 뜻한다.

“별경이”를 비롯하여, “친북좌파” 또는 “극우보수” 같은 용어가 그 개념보다는 상대를 헐뜯고 폄하하기 위해서 널리 사용되고 있고, 반면에 우리나라에 진정된 진보와 보수가 있는냐는 목소리는 거의 파묻혀 온 게 사실이다. 일본의 우익은 민족주의 세력인데 왜 우리의 우익은 사대주의자들인가 하는 물음도 별로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좌파’, ‘우익’, ‘진보’, ‘보수’ 같은 용어를 그 개념보다는 그 말이 주는 막연한 이미지에 사로잡혀 사용하게 때문이다. 이렇게 이미지에 사로잡혀 언어를 쓰는 한 언어의 왜곡은 피할 수 없고, 언어의 왜곡이 일어나면 그 언어

가 주는 정치적, 사회적, 사상적 메시지는 실종되고 오직 말꼬리를 붙잡고 벌어지는 말싸움만 유행하게 되어 있다.

나는 노무현 대통령의 다듬어지지 않은 말솜씨를 칭찬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 정치적 수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통령으로서 진중하게 표현하기를 바라는 사람이다. 그러나 한 가지는 대통령을 칭찬하고 싶다. 그것은 그의 언어가 이미지에 사로잡힌 언어가 아니라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그가 쓰는 언어는 그 개념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미국한테 매달려 가지고 바짓가

만일 언론이 국가와 국민을 그렇게도 위한다면 노 대통령의 언어를 이미지에 이해하지 말고 개념에 충실하게 이해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래야 우리가 노무현 정권 5년의 경험을 잃어버린 5년이 아닌 생산적인 5년으로 바꿔 나갈 수 있다. 사실을 왜곡하거나, 적을 공격하기 위하여 온갖 가십성 기사를 동원하거나, 추잡한 성적 묘사로 발행 부수를 늘리려 하거나,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거나, 언론 자유를 언론사주의 자유로 약화하거나, 우리 사회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언론은 분명히 불랑상품의 하나이다. 그리고 그런 불랑상품을 추방하는 데는 국민의 노력이 필요하다. 말 그대로 그렇다. 그런 언론은 스스로 반성하고 스스로 새로워져야 한다.

언어는 우리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매체인 동시에 우리의 생각을 왜곡할 수 있는 가장 교묘한 매체이다. 언어를 이미지로 파악함으로써 언어 왜곡을 일삼는 일, 언론인이나 정치인은 물론이고 국민 모두가 이제 이런 언어 습관에서 벗어나는 노력을 해 보면 좋겠다. 언어 문화를 선진화하는 시발점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올해는 특히 대통령 선거라는 큰 정치 행사를 앞두고 있으니 이런 노력이 더욱 절실히 필요해짐을 느낀다. <국어단체연합 국어상담소장 다산연구소 제공>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 언어와 언어 왜곡

람이 매달려 가지고, 미국 뒤에 숨어서 형님 백만 민졌다, 이게 자주 국가의 국민들의 안보의식일 수가 있겠나.”라는 말이나, “일본에서 국가가 일어나서 통일되면 한국에 와서 짓밟고 중국이 통일되고 또 중국에서 새 왕조가 일어났다 하면 꼭 한국에 와서 분탕질했다.”라는 말로 우리 언론이 심히 요동친 일이 있었는데, 우리 언론이 조금만 사려 깊게 생각했다면 이런 노 대통령의 입을 비호교적인 것으로 질책할 지언정 그의 말의 본질은 안으로 새겨져야 했다. 그런데 언론은 그의 말을 조금도 새겨주지 않고 그의 말꼬리를 붙잡고 총공격을 감행하는 데 매진함으로써 노 대통령의 이미지를 악화시키는 데 활을했다.

시설

여수엑스포 실사 완벽하게 대비해야

2012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을 위한 현지 실사일정이 확정됐다. 세계박람회 사무국(BIE) 실사단은 오는 4월9일부터 13일까지 여수를 방문, 박람회 준비 사항 등을 집중 점검한다. 여수 실사를 시작으로 모로코(4월30~5월4일) 및 폴란드(5월14~18일)와의 유치경쟁이 본격화된 것이다.

실사단은 박람회 개최지 입지여건, 정부의 관심도, 예산관감액 수 등 14개 필수조사 항목을 평가 분석하고 질의·응답 등을 거쳐 실사결과를 BIE 집행위원회와 총회에 보고하게 된다. 실사결과는 개최지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실사단에 박람회 개최 의지를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국가의 의지는 어느 항목보다 평가 비중이 높다. 정 부와 국회, 민간유치지원위원회는 비롯 전남도, 여수시 등 모두가 역량을 모아 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모로코와 폴란드는 만만함 상대가 아니다.

여수는 2010세계박람회 유치 경쟁에서 중국 상하이에 밀린 쓰라린 경험이 있다. 당시 실사단의 조사결과를 중국, 러시아, 멕시코, 폴란드에 비해 불리했다. 가장 큰 감점요인은 교통·숙박시설 등 인프라 미비였다. 서울 등 대도시와 달리 떨어져 있고 상하이나 모스크바와는 달리 배후도시가 작아 관광객 유치에 애로가 있다는 것이었다.

현재 상황도 4년 전보다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여수공항을 비롯 순천~여수간 국도 17호선,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등 SOC(사회간접자본시설)는 열악하다. 다행히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엑스포 여수 유치를 위해 적극 지원을 약속하면서 청신호가 켜졌지만 안심할 상황은 절대 아니다.

이번 실사단의 방문은 세계박람회 여수 유치를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철저하고 완벽한 대비’만이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는 길이다.

교육·의료시설 빠진 혁신도시 안 된다

나주에 조성되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가 올 연말 착공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교육·의료시설 설립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의료시설은 혁신도시 이주기관 종사자들이 가족 동반 이주 조건 최우선 순위로 꼽고 있다는 점에서 광주·전남 혁신도시가 ‘반쪽 도시’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광주와 전남도 등은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가족 동반 이주 혁신도시 성공의 관건인 만큼 양질의 교육·의료시설 유치를 타 시설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수차례 건교부에 건의했다고 한다. 하지만, 건교부의 기본구상에는 대형 상업시설, 특수목적학교, 대형 오피스텔 등만 선정했을 뿐 교육·의료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혁신도시 건설의 목적은 수도권 인구 분산을 통한 국토균형발전이다. 따라서 혁신도시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많은 수도권 인구가 유입되느냐에 달려 있

다. 더욱이 광주·전남혁신도시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큰 220만7천 평에 2만 가구,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에 이른다. 입주기관 종사자들의 가족 동반 이주 없이는 인구 5만의 혁신도시 건설은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혁신도시는 사회간접자본, 매력요인, 인적자원, 지역 이미지 등 ‘장소 마케팅’ 전략이 수립돼야 성공할 수 있다. 그런데 ‘장소 마케팅’의 핵심요소인 양질의 교육·의료시설 없이 어떻게 혁신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혁신도시에 수도권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수도권과 비슷한 수준의 교육·의료시설이 갖춰져야 한다.

교육·의료시설 유치는 상업시설 등과는 달리 절차가 복잡하고 시일이 오래 걸린다. 정부는 혁신도시를 ‘반쪽 도시’로 만들 생각이 아니라면 교육·의료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현실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술과 도박, 섹스, 적당히 즐길 수만 있다면 세상에 이만큼 좋은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도가 지나치면 치명적인 독이 될 수밖에 없다.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면 패가망신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에게 이 3가지는 아예 금기사항으로 취급되고 있다. 오

데 엄청난 파위를 자랑하는 용병들이 자리하고 있다. 남자부 삼성화제의 레안드로(24)와 대한항공의 보비(28)가 주인공들이다. 그런데 이들이 코트에서 필멸 받고 있는 이유가 부인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돌고 있다.

스포츠와는 상극중에 상극이 아닐 수 없다. 이 때문인지 금주령은 기본이고 일부 감독들은 단체생활하는 선수들에게 애인이나 부인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등 섹스 금지령까지 내리기도 한다.

이 끝날 때까지 함께 있으려고 아파트를 얻어주고 원정경기 때는 각 도시마다 동행하도록 했는데, 어쨌든 팀은 1, 2위까지 이끄는 등 효험을 톡톡히 보고 있다. 모 감독은 지금까지 좋은데 너무 지나쳐 역효과가 날까 노심조

사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었다. 기본적인 욕구만 해소하도록 해야 하는 것인지, 어느만큼이 적당한 것인지 등등까지 고민하고 있는 모양이다. 섹스와 사랑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할 스포츠 과학자들의 분발이 촉구되는 대목이다.

기현호 체육·여매체부장 khh@

스포츠와 섹스



NGO 칼럼

김호림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당초 5.3%보다 크게 낮은 4.4%로 전망했으며, 작년 경제성장률도 5.2% 예상에서 다소 낮은 5.0%로 전망했다. 또한 지역 불균형발전

전과 양극화 심화는 지방 서민의 삶을 더욱 파국하게 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얽히고설킨 문제를 해소할 신약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노무현 대통령의 4년 연임제 제안은 만병통치약은 되지 않더라도, 문제를 헤쳐나가는 돌파구는 될 수 있을 것 같다.

문민정부에서 국민정부로 또 참여정부로 정권이 바뀌어 가면서 레임닥이

내년은 대통령의 임기와 국회의원의 임기가 비슷하게 마무리되는 해인데, 20년 만에 오는 절호의 기회를 다 놓쳐버리게 될 수 있다.

먼저 이야기 한 사람이 미워서 허송세월하다가는 제도약의 기회를 놓치고 땅을 치며 후회할지도 모른다. 감정적으로 개헌 논의에 임하기에는, 잃어야 할 것이 너무 크다. 중요한 관점은 ‘개헌이 국민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 아닌가’이다. 또 하나, 이 나라의 미래와 국민에게 이익이 될 시스템을 헌법에 어떻게 얼마나 반영시킬까 하는 것이다. 개헌의 필요성에 국민적 합의가 있다

멈춰선 한국, 개헌으로 돌파구 찾아야

오는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차기 정권에서는 임기가 끝나기 2년 전부터 레임닥으로 국가의 대소사가 결정없이 표류할 지도 모를 일이다. 정치의 불안정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누가 주장했는가와 상관없이 4년 연임제(1회 한함)는 대통령 집권 이후의 평가 장치로서 국정의 효율성, 책임성, 안정성을 추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지난 1987년 전 국민적인 민주화 열망은 지금의 9차 개정 헌법을 낳았다. 끝자는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 그리고 국정감사권의 부활이었다. 국민에게 대통령의 연임은 곧 독재 부활 가능성으로 받아들여졌던 시절이었다. 그로부터 20년, 이제 시대는 변하여 독재정권의 장기 집권 현상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국민의식수준의 성장과 함께 민주주의는 국회에서 지방으로 골목으로부터 가정까지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대상이나 국민정서의 변화로 볼 때 개헌 논의는 지금이 적기이다.

면, 시기와 내용 등은 각계 각층의 다양하게 의견수렴을 하면 될 터이다. 국민이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는데도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식의 정치인의 태도나 ‘개헌 논의 하자’에서 ‘때 놓쳤다’며 반대로 급진화한 보수 언론의 사실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지난번 한 방송에서 10월 여야 국회의원 296명 중 1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 5년 대통령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는 개헌이 필요한 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 의원의 51.2%인 83명이 찬성하였다는 보도를 접했다. 개헌 논의를 진행할 토양은 충분하다고 보여지며, 다만 통일 이후의 국가 상, 부통령제 실시 여부, 개정의 범위 등은 신중하게 접근하면 될 터이다.

현 정부가 미워서 지금이 시기가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한나라당이 반대하니 안 된다는 것은, 개헌의 중심에 있는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개헌 여부는 최종적으로 국민이 판단할 몫이다. <광주YMCA 기획조정실장>

문구점서 초·중학생들에 부적까지 팔아서야

집 인근 문구점에 이른 아침부터 초·중학생들이 북적거리 무슨 일인가 왔더니 황금패지해를 맞아 부적을 사려고 모인 학생들이었다. 스티커 모양의 부적은 조잡했고 화투장크기에 붉은 글씨로 이상하게 만들어진 것이었다. 값은 1장에 300원, 500원씩 했다.

부적 내용은 기막하다. 성적올리는 부적, 부적해 에인을 구하는 부적, PC게임 잘하는 부적 그리고 재물 생기는 부적까지 있

었다. 아이들은 4~5장씩 사 주머니나 필통에 넣고 다닌다고 했다. 초등학교생뿐 아니라 중·고등학교생들도 대학입시 합격이나 경시대회, 기말고사를 앞두고 책상에 붙여 놓는다는 것이다.

학교나 가정에서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또는 문구점을 상대로 지도를 펴야 할 것 같다.

▲이기철·광주시 서구 농성동



물개 키우기



우치 동물원에도 물개(캘리포니아 물개)가 들어왔다. 그 동안 타지역 동물원이나 해양 동물쇼장에서만 보던 바로 그 물개다.

2~3년생이라고 하는데 첫 느낌은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새끼를 처럼 보였다.

물개의 수명이 대략 30년 정도라고 하니 완전히 성숙하려면 3년은 넘어야 한다.

이런 계산법은 일반적으로 동물 평균 수명을 추정할 때 쓰인다. 즉 3년의 성(性) 성숙기에 이르면 끝까지 10을 해 30년을 산다는 방식이다. 사람한테 대입한다면 성장기가 15년 정도니 사람은 대략 15년은 살아야 맞는 것이다.

과학자들이 절제된 생활함으로써 늘릴 수 있는 인간 수명을 120년으로 잡는 이유이기도 하다.

물고래나 물개처럼 조련이 잘 되는 동물들은 매우 영리하다. 그렇기 때문

에 초반에 마음을 열기도 쉽지 않다.

이 물개들(베티·피터·레이첼) 역시 낮을 가리는 정도가 심했다.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같이 따라 온 외국 사육사에게만 매달리고 우리에게 좀처럼 반문을 보이지 않았다.

외국 사육사가 머문 10일 동안 우리 사육사도 열심히 얼굴 익히기와 먹이 주는 요령을 배웠다. 그리고 그가 간지 3일째.

얹 것 ‘베티’는 어느 정도 먹이(명태)를 받아먹는데 수컷 ‘피터’와 또 하나의 암컷 ‘레이첼’은 입도 벌리지 않는다.

할 수 없이 강제급여를 해야 할 것 같다.

처음 만났을때의 지루한 싸움은 결국 사람의 인내심과 동물의 자존심간의 한판 대결이다. 독자들은 누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할까. <최종욱 광주유치동물원 수의사 lovnat@hanmail.net>

무조건 수술 권유 보다 믿음가는 진단 먼저

집안에 있던 화분을 들고가 어머니가 허리를 못 쓰셨다며 통증을 호소했다.

일단 가까운 병원으로 모시고 갔는데 대뜸 수술하라고 했다. 60세가 넘은 탓에 무작정 수술을 하게 부담스러워 다른 병원을 갔더니 통일 치료하면서 약물 치료를 해보자고 하는 것이다.

두 병원의 처방이 워낙 달라 또다시 다른 병원을 찾아 갔더니 물리치료만하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고민하다가 약물과 물리치료를 병행해 지금은 거의 다 나왔다.

민약 처음 찾았던 병원에서 들었던 말처럼 수술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병원 의사마다 처방과 진단 결과가 달라 나올수는 있다. 하지만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면 의료 상식이 전혀 없는 일반 시민들은 누구 말을 믿어야 하겠는가. ‘닥터 쇼킹’을 해야 되는 것인가.

▲김강성·광주시 북구 용봉동

◇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光 叻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略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정치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 1부 2200-618	사진부 2200-690	사업 2부 2200-552	(F A X 02-773-9335)
(F A X 222-4267)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정액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